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120분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논술우수자)
수험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 1]이 60점, [문항 2]가 40점입니다.
2.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시오.
3.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시오(연필, 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4.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시오(수정 테이프, 지우개 사용 가능, 수정액 불가).
5.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란에 작성하고, 답란 밖에는 작성하지 마시오.
6.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지의 답란이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논술고사(인문계열)

[문항 1]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두 가지 책임론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밑줄 친 (A)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문 (나)~(마)를 모두 활용하여 정당화하시오(정당화에는 자신의 주장,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그리고 이에 대한 재반론을 포함할 것). (1,000자±100자, 60점)

(가) 오늘날 책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다. 어떤 것 혹은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책임의 현실적 중요성과 필요성으로부터 책임의 당위가 저절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강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야 할 책임이 어른에게 있음은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책임의 본질과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책임 개념은 지금까지 늘 자유 개념과 연계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윤리학은 의지의 자유와 결정의 자유를 책임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긴다. 그러나 책임 개념은 윤리학의 역사에서 늘 자유 개념의 뒷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반하여 홀(Jann Holl)은 무엇보다도 사회 안녕의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보다는 사회 질서가 책임의 필수 조건이라고 본다.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책임이 있다거나, 책임은 자유를 내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미 고대 희랍의 문학과 철학에서부터 등장한다. 이와 같이 책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아직 충분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주요 논쟁은 (A) '인간의 자유의지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인가, 아닌가'하는 점이다.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규범적 책임론'이다.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행위자가 행위를 할 때 자유로운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조건들이 있었는지에 주목한다. 객관적인 상황 조건까지 감안하여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적법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책임이란 규범에 부합하게 행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라고 본다. 즉 책임은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인간이 외부의 어떠한 강제나 방해가 없었음에도, 자신의 양심 내지 이성에 반한 행위를 결의한 것에 대한 비난이다. 나아가 인간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인가도 바로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에 중점을 두고 책임의 근거를 설명하는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이 있다. 어떤 인간의 행위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타인과 사회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비난·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여 사회규범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책임을 형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책임의 내용이 예방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의 목적은 이미 일어난 불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뿐만 아니라, 형벌이 달성하게 될 예방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방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에 주안점을 두게 되면 행위자가 행위 시에 자유의지를 가졌는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행위자에게 다른 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자를 비난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 법』 활용

(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생각하고 욕구한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 무엇을 하지 않고자 하는 욕구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욕구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욕구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들 때 그 욕구를 차라리 갖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이 생각으로 인해 이어지는 욕구가 바로 2차적 욕구이다. 물론 2차적 욕구에 대해 3차적 욕구를 가질 수도 있다. 욕구에 대한 중층 구조적 설명은 프랭크퍼트(Harry G. Frankfurt)의 이론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프랭크퍼트의 인간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은 칸트 철학이 지닌 도덕 지향적인 의지 분석을 벗어난다는 점이다. 그의 이론은 인간 의지에 대한 상식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다. 인간의 욕구는 다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에 대해 가장 강한 충동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갈증으로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데 만약 눈 앞의 물이 바닷물이라면 그 사람에게에는 이제 이러한 욕구에 뒤따라 그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자각과 더불어 그 물을 마시지 않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날 것이다. 이때 처음에 일어나는 욕구는 1차적 욕구이고, 나중에 일어나는 욕구는 2차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1차적 욕구는 식욕이나 흡연, 음주 등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는 것으로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 충동적인 욕구 외에도 1차적 욕구를 강화나 약화, 혹은 그 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2차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2차적 욕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인간은 2차적 욕구를 가질 수 있어, 단순히 1차적 욕구에 지배되지 않고 1차적 욕구를 따르거나 또는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유의지에 기반한 2차적 욕구를 가진 존재만이 인격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격체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의 자유가 아니라 의지의 자유이다. 행위의 자유는 강제나 방해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것은 욕구이다. 욕구의 지배하에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인간이 비난받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야기하는 것은 욕구인 것이다. 다만 인격체로서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따를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욕구도 가지고 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상벌을 주는 이유는 이를 통해 그 학생의 행위에 영향을 주어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거나 행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그 학생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어떠한 상벌도 학생을 더 좋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인간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2차적 욕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활용

(다) 근래의 뇌과학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의 문제다. 뇌과학은 최첨단 장비를 통해 두뇌 속을 구석구석 탐색했지만 인간 행동이 물리화학적 인과원리에 따르는 신경연결망에 묶여 있을 뿐, 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를 근거로 뇌과학자들은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도 말할 수 없고 책임을 말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책임을 말할 수 없는 걸까? 현대 뇌과학에 앞서 이미 두뇌이론을 제시하며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검토했던 하이에크(Friedrich Hayek)의 견해를 살펴보자. 그는 1952년 발간한 『감각적 질서』에서 “자유의지 또는 정신이라는 독립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이란 물리화학적 인과율에 따르는 신경작용의 산물이고, 인간 행동도 마찬가지로 신경작용의 결과라고 인식했다. 현대 뇌과학자들은 이러한 하이에크의 이론을 두뇌과학의 효시라고 격찬하면서 자유의지도, 그에 따른 책임도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하지만 정작 하이에크 자신은 결정론을 주장하면서도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의 뇌과학자들과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인간의 행동이 물리화학적 결정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책임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지적 혼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이에크는 비판한다. 그는 책임의 문제는

자유 의지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자들이 책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자유 의지가 책임의 근거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 자유는 개인적·심리적 현상을 표현하는 개념이고 인간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었다. 자유 의지는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기억에도 좌우되지 않으며 어떤 원인에 의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자유 의지자(free willer)'는 타인의 비난, 칭찬, 처벌 등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 의지자들의 사회에서는 질서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책임의 근거를 자유 의지 대신에 사회적이고 법적인 범주에 속하는 행동의 자유로 대체할 것을 제시했다.

자유와 책임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 즉 사회제도와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는 개념이다. 책임 원칙은 개인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자신의 행동이 타인들에 끼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칙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칙', 즉 '사회적 규약'이다. 모든 사회 제도의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책임의 문제도 사회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행동과 그 결과에 책임지게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책임 원칙의 기능이다. 인간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행위가 타자와의 사회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활용

(라) 현대 법질서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주인공 지킬 박사는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실험을 위해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실험 결과 새로운 인격체인 악한 하이드가 탄생한다. 그렇다면 지킬 박사는 자신의 또 다른 인격 하이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 형법상 범죄자가 심신장애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심신장애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심신상실'과,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상태인 '심신미약'으로 구분된다. 심신상실자는 처벌받지 않고,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받는다.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여부는 행위자가 죄를 범할 시 심리적·신체적 상태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인도 누구나 일시적으로 심신장애자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만취, 약물 중독, 혹은 수면 중인 경우 등이다. 그래서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범한 뒤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킬 박사도 하이드가 저지른 살인 행위에 대해 약물을 주입하고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하이드와 같이 자아상, 대인관계, 정서가 불안정하여 충동적인 정신질환 상태인 경계성 인격장애자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현대법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판례에 비추어 보면, 하이드의 경계성 인격장애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이드의 인격장애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며, 범행 동기나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하이드가 되어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은 일종의 인격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인격장애를 가진 것만으로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게다가 하이드는 인격이 문제일 뿐 심신장애자처럼 범행 당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통제 불능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약물에 의해 육체적·정신적 조절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명정상태'였다는 주장도 인정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범죄행위가 심신상실을 인정하여 처벌되지 않은 사례도 있을까? 1840년 빅토리아 여왕과 왕자를 해치려던 에드워드 옥스퍼드가 정신이상을 이유로 사면된 역사적 사건이나, 최근 지인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중대한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상해행위는 인정되나 환각, 피해망상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등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한 사례는 많지 않다. 하이

드는 범죄를 저지를 때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점에서도 심신상실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지킬 박사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던 하이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정치와 법』 활용

(마) 지금까지의 세계는 개인주의,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이라는 자유주의 패키지가 지배해 왔다.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외적인 힘과 우연한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우리 각자는 자유라는 요술봉을 휘둘러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다. 당신 외에는 누구도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알거나 당신의 선택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기에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좋게 느껴지는 것을 선택할 자유는 중요하다고 보았다.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모든 일의 의미를 우리 안에서 찾음으로써 우주에 의미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인본주의는 신 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전환하여 신을 밀어냈다. 로크, 흄, 볼테르 등은 신을 인간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신보다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라고 했다. 19세기 이후 인본주의자들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석양을 바라보고, 괴테를 읽고, 일기를 쓰고, 민주적 투표를 시행하는 일들을 권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자유의지가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인간뿐만 아니라 침팬지와 개, 앵무새도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지에서 중요한 것은 앵무새와 인간이 내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자신의 욕망을 선택할 수 있느냐이다. 진화론에 따르면 동물의 골격이나 질한 등 신체형질만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 무엇을 먹고 누구와 짝지을지도 결정된다. 또 인간의 심리와 행동, 본성도, 두뇌나 유전자와 같이 타고난 생물학적 물질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인간은 자신이 자유가 있다고 느끼고, 자신의 소망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는다. 왜 나는 검은색 자동차가 아니라 빨간색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할까? 하지만 이 소망도 내 선택이 아니다. 내가 특정한 소망을 느끼는 것은 내 뇌의 생화학적 과정들이 그런 느낌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9세기와 20세기에 자유주의에 대한 믿음이 통했던 이유는 나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외부 알고리즘을 실현할 과학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세기까지의 기술조건에서는 자신의 내적 목소리를 따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발달한 생명공학과 유전공학 같은 새로운 기술은 우리를 해킹해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는 외부 알고리즘을 만들어 냈다. 자유의 권한은 개인들로부터 그물망처럼 얽힌 알고리즘으로 옮겨가고 있다. 앞으로는 인간을 자기 소망에 따라 인생을 운영하는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대신, 네트워크로 얽힌 전자 알고리즘의 관리와 인도를 받는 생화학적 집합체로 보는데 더 익숙해질 것이다. 21세기의 구글과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전례 없는 연산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히 예측할 뿐 아니라, 이러한 알고리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실제로 더 큰 이득이 됨을 알려준다. 21세기의 과학기술은 '신은 인간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인간 상상력은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활용

[문항 2] 여러분은 A국과 B국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향후 C국의 국가정책을 수립하려 한다.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모두 이용하여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의 이유와 선택한 모델의 정책을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각각 서술하시오(자료에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서술한 문제점 중 하나를 골라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하시오. (600자±60자, 40점)

(자료 1) <자료 1-1>은 A, B, C 각국의 명목 1인당 국내총생산(GDP), 산업비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리한 표이다. 산업 비중은 각 산업의 부가가치를 모든 산업의 부가가치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자료 1-2>는 각국의 가구들을 5분위로 나누어 1분위(저소득층)와 5분위(고소득층)의 가구소득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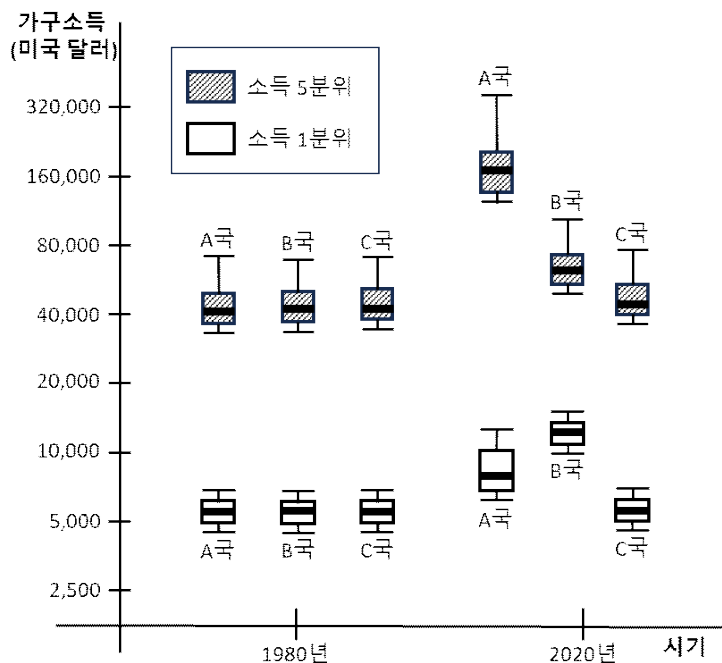
<자료 1-1> A, B, C국의 1인당 GDP, 산업 비중, 온실가스 배출량

	A국			B국			C국			
	1980년	2000년	2020년	1980년	2000년	2020년	1980년	2000년	2020년	
명목 1인당 GDP (미국 달러)	13,200	28,500	35,400	13,000	28,000	34,900	12,500	13,100	13,600	
산업 비중 (%)	IT 산업	10	18	20	10	11	11	5	6	6
	제조업 (IT 제외)	31	27	25	28	31	36	25	26	25
	기타 산업	59	55	55	62	58	53	70	68	69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 tCO ₂)	520	620	770	512	754	1,062	568	570	575	

* IT 산업은 IT 제조업과 IT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함.

*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모든 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1-2> A, B, C국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분포



* 네모 중간에 있는 굵은 선은 중위값을 의미하며, 네모의 높이는 상위 25%와 하위 25% 간의 소득 차이를 나타냄.

(자료 2) <자료 2-1>은 소득수준과 소득격차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표이다. 2020년 60개 국가를 표본으로 하여, 소득격차와 명목 1인당 GDP에 따른 국가별 삶의 만족도를 분류했다. 명목 1인당 GDP는 25,000 달러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소득격차는 가구소득 5분위와 1분위의 중위값 차이 100,000 달러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삶의 만족도는 각국 국민 1,000명을 무작위로 택하여 '현재 삶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계산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위 30개 국가는 'H', 삶의 만족도가 낮은 하위 30개 국가는 'L'로 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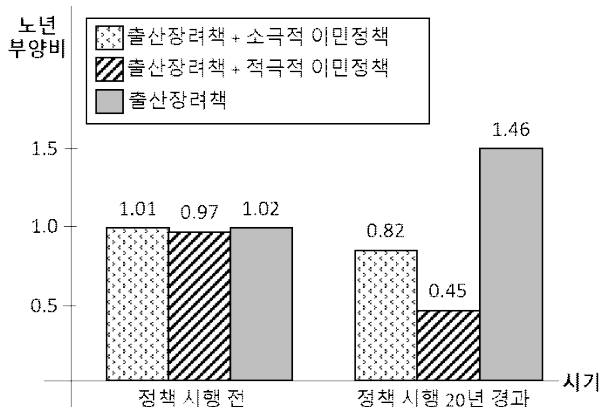
<자료 2-1> 명목 1인당 GDP 및 소득격차에 따른 삶의 만족도

		소득격차가 큰 국가		소득격차가 작은 국가	
		1인당 GDP가 높은 국가	1인당 GDP가 낮은 국가	1인당 GDP가 높은 국가	1인당 GDP가 낮은 국가
삶의 만족도	H	7	5	13	5
	L	8	10	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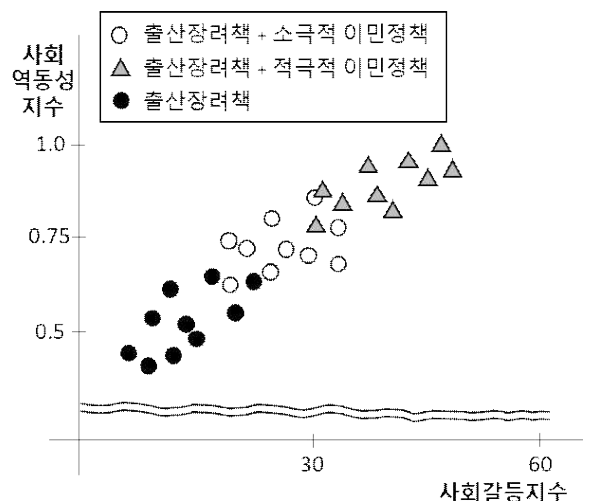
(자료 3) 각국이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1)출산장려책, (2)출산장려책 + 소극적 이민정책, (3)출산장려책 + 적극적 이민정책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A, B, C국은 현재 공통적으로 출산장려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B국은 소극적 이민정책을, A국은 적극적 이민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상 세 가지 고령화 대응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30개 국가를 20년간 추적 조사하였다. <자료 3-1>은 각 정책을 추진한 국가 집단의 평균 노년부양비 변화를, <자료 3-2>는 정책 시행 후 같은 국가 집단별 사회갈등지수와 사회역동성지수를 나타낸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 인구수로 계산한다. 사회갈등지수는 사회구성원이 사회 내 갈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0'(낮음)부터 '100'(높음) 사이의 값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사회역동성지수는 내·외부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을 '0'(낮음)부터 '1'(높음)까지의 값으로 나타낸다.

<자료 3-1> 고령화 대응 정책에 따른 집단별 평균 노년부양비 변화



<자료 3-2> 고령화 대응 정책 시행 후 집단별 사회갈등지수와 사회역동성지수



* 정책 시행 전 조사대상 국가들의 사회갈등지수와 사회역동성지수는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